제56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

2024. 7. 12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‘24. 7. 12. (금) 16:00 ~ 18:00

○ 출석위원(13명)

- 민간 위원장 (주재)

- 민간위원 : 권남훈, 박익수, 신혜은, 오균, 우태희, 윤명오, 이인호, 이혁우, 정진경, 조원동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법제처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①	2024-323	행안부	지방규제혁신위원회 24년 상반기 주요 규제개선 성과	보고안건
②	2024-324	국토부	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	보고안건
③	2024-325	국토부	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	보고안건
④	2024-326	과기정통부	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	보고안건

Ⅲ. 회의 결과

1. (보고) 지방규제혁신위원회 '24년 상반기 주요 규제개선 성과
(행안부, 2024-323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**'24년 상반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**

- **(규제발굴 다각화)** 지자체 건의 外 **업종협회 건의, 행정심판 재결례** 분석, **민생규제 대국민 공모전** 등을 통해 **규제혁신 사각지대 해소**

- **(내실있는 운영) 매월 1회 정기회의** 개최*로 규제혁신 연속성·속도감 제고, 합리적 대안 마련 및 **부처 수용시까지 해결 노력**

  * '24년 상반기 총 5회 개최, 총 20건 처리(심의 10, 보고 10)

○ **주요 성과**

- **(석탄 경석* 규제개선)** 폐기물로 관리되어 산업적 활용이 곤란했던 강원지역 경석 규제 해소를 위해 **위원회 심의**(4차례) 등 **지속적 노력**

  *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톤 존재

  . **석탄 경석의 폐기물 제외 및 관리방안**(환경부 훈령 및 강원도·태백시 조례) **마련,** 행안·환경부장관-강원도지사-태백시장 간 **공동협약 체결**(6.13.)

  ※ 경제적 편익 3,383억원 발생 추정 및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

- **(기타 규제개선) 위원회 심의** 또는 **해결과제의 위원회 보고·논의**를 통해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대안 마련 및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 집중 해소*

  * (예시) ▵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(충북 단양) ▵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체계획 절차 완화(충남 보령), ▵도심형 스마트팜 농업인 인정(세종시)

□ **논의사항**

○ 중앙부처 규제 외에도 **지자체의 소극행정** 등 **그림자·행태규제** 개선, **조례·규칙 등 등록규제 정비**를 위한 노력 필요

○ **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과정**에서 지자체 비협조 시 **혁신위 역할 필요**

□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접수

2. (보고)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(국토부, 2024-324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**(운영현황)** '19년부터 총 13**회**의 **심의위원회***를 개최하여, **54건 (실증특례 46건, 적극해석 8건)의 규제특례** 부여('24.5월)

* 위원장 : 국토부장관, 민간위원장 / 30명 이내의 정부·민간위원으로 구성

○ **(대표사례)**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(현대차 등, '20.6.25)

- **(사업내용)** 이용자의 **실시간 이용 수요**에 따라 **운행경로**를 **탄력적으로 조정**하여 최적의 경로로 운행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
- **(규제특례) 농·어촌** 및 **대중교통 취약지역**에서만 **운행 가능**하여 도심 등 운행 제한
- **(실적)** 시민의 이동 편의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**규제특례를 받아 실증을 거친 경우 도심 등**에서도 **운행 허용**

*「여객자동차법」 개정('23.10 시행)

○ **(향후계획)** 법령개정 및 승인사업 규제정비 강화 추진

- **(법령개정)** 종전 승인 사업과 **동일·유사한 신규사업**은 **관계기관 검토 기간 단축**(30→15일 이내), **전문위 심의 형태로 개편**

* 국조실, 법제처,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가 함께 법 개정 추진중

- **(규제정비) 사업 개시 단계**부터 **안전성·효과성 검증**을 위한 **데이터**를 **규제부처와 협의**하여 정하고, 해당 데이터를 **주기적으로 제공**하여 법령 개정 지원 **추진**
- **(위원회 개편)** 현재 심의위 임기 만료에 따라 **차기 심의위**를 **구성 중, 전문위**도 **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구성·운영** 추진

□ **논의사항**

○ 더 많은 특례부여와 부여된 특례가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강구 필요

□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접수

3 (보고)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(국토부, 2024-325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**(도입배경)** 모빌리티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**직접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**를 운영함으로써 **신속·전문적** 검토 지원

○ **(운영현황)** ’23.10월 제도 시행 이후 **신속확인 17건, 실증특례 8건에 대한 결과통보** 완료(’24.6월 기준)

○ **(대표사례)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**(현대차)

- **(사업내용)** 긴 충전시간(급속 20~40분, 완속 4~7시간) 단점을 보완하여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, **충전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교환**(5분이내)
- **(규제특례)**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**제작기준 부재**(「자동차규칙」), 배터리 탈부착은 **정비행위로** 등록된 정비업자만 가능(「자동차관리법」)
- **(특례사항) 전문기관의 안전성 확인**을 받아 배터리 탈부착 차량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**특례를 부여**하여, **기술경쟁력 확보**에 기여

○ (**향후계획**) 과제발굴 방식의 전환, 체계적 법령정비를 통한 기업 안정성 강화 추진

- **(과제발굴)** 규제부서가 **선제적으로 기획**한 후 사업자를 모집하는 **‘기획형 규제샌드박스’** 방식 도입
- **(법령정비)** 승인시 규제 부서와 법령정비 판단에 필요한 **데이터 항목**을 정하여 사업자에 고지, 선제적으로 데이터 관리

□ **논의사항**

○ 규제부처가 스스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, **적극적인 운영**을 통한 **성과 창출**이 필요

□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접수

4. (보고)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(과기정통부, 2024-326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**(운영현황)** ’21년부터 총 **7회**의 **심의위원회***를 개최하여, **37건**(실증특례 25건, 적극해석 12건)**의 규제특례** 부여(’24.6월 기준)

* 위원장 : 과기정통부장관 / 정부위원 5**인**(기획·행안·산업·국토·중기) + 민간위원 **12인**으로 구성

○ **(대표사례)**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(한국원자력硏)

- **(사업내용)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**해「탐지→식별→분석→무력화→사고조사」를 원스톱으로 수행함으로써 **불법드론의 위협을 지상·공중에서 대응**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

- **(규제특례)** 재난관리 목적 外 **재난안전통신망 사용**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**정보통신망 장애유발행위 금지** ⇒ **자체 무선국 설치** 및 **他정보통신망 피해 방지** 조건으로 실증특례 승인(「재난안전법」, 「정보통신망법」)

- **(실적)** 원천기술 국산화를 통한 **불법 드론**에 의한 국가 주요 **기반시설 피해 방지** 및 **안티드론** 분야 국가 기술 **경쟁력 확보**

○ **(향후계획)** 제도 정착 및 활성화 추진

- **(홍보 강화) 제도 자체 홍보** 뿐만 아니라 **참여기업 및 성과 홍보를 강화**하여 연구특구 샌드박스 **인지도 제고 및 인식 개선**

- **(규제발굴)** 기업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**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**하고 **기술 및 기업 컨설팅**을 통해 샌드박스 **활용 확대**

□ **논의사항**

○ **연구개발특구 내**에서만 **실증**하는 것에 **한계**가 있어 보이므로, **실증 지역 제한**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

□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접수